

플라스틱 업계 위기, 대책마련 위해 힘써 건의문 및 결의문 통해 업계 입장 대변



이 재 학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최근 중소 플라스틱제품 업계가 원료가격 폭등과 폐기물부담금 부과, 1회용품의 과도한 사용규제의 3중고로 문닫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등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관련업계들은 정부가 플라스틱 업계의 위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재학 이사를 만나 현행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플라스틱 원료제조 대기업이 부담하던 폐기물 부담금이 지난 2002년 개정되면서 플라스틱제품 제조 중소기업이 부담금을 따안게 됐습니다. 현재 7,000여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연간 20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제조업자가 전년도 제품의 출소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하면 환경자원공사에서 부담금액 산출과 납부고지를 통해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재학 이사는 “7,000여 플라스틱제품 제조 중소기업체 중 3,000여 업체가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이나 30%에 해당하는 1,000여 업체 정도가 제품 출고 실적을 신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플라스틱제품 제조 중소기업체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제품출고 실적에 관한 신고를 꺼려하고

“원료 메이커 업체가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있다.

신고를 안한 기업들은 오히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등 법안의 허점이 있어 더욱 신고를 꺼려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이재학 이사는 폐기물 부담금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동 부담금을 제품가에 반영할 수 없게 되고 전액 제품제조 중소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 형태가 다양하여 수탁 및 위탁 제도가 많은 특성이 있어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업체가 모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구조가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 되어 납부한 해당 제품이 다시 면제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과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소수의 기업(23개)에서 수천개의 제품제조업체로 확대되어 행정력 낭비가 크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는 환경자원공사측에 폐기물 부담금의 기본원칙인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폐기물 부담금을 제품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과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수출 및 별도의 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책을 요구한 상태다.

이재학 이사는 “원료 메이커 업체가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현재 개정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덧붙여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50달러가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책은 26달러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관련해 원료의 원가공개와 원유가격과의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플라스틱 연합회와 업계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원료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마련, 회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이번 달 대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업체들과 집회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이재학 이사는 “플라스틱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가 파악, 대책을 마련해 주리라 믿고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발전없이 국가경쟁력은 확보될 수 없다. 하루 빨리 플라스틱제품 업계와 정부간의 의견 조율과 문제해결을 통해 난고가 해소되길 바란다. ☞

이한얼 기자